

## “문화전당-문화원 일원화 빨리 추진해야”

### 뉴스 초점

#### 이특법 개정안 2호 발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는 공감 관련 당사자 협의체 구성을 방향·내용 충분히 논의해야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그동안 1000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안정한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병훈(광주 동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이원체제를 해소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설립 및 법안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수도 조성사업 근간이 되는 아특법 개정 및 핵심 기반시설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문화단체나 시민사회는 개정안 2호 중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운영체제 일원화 및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있다. 즉 운영체제 일원화와 국가 지원을 받을



오는 12월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원 위탁 여부가 최종 시한으로 다가오면서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 및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와 문화단체의 관심이 높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수 있는 정부 상설 기관화는 공감하지만 먼저 지역 사회와 문화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의 핵심인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방안이 이원화된 문화전당 운영체제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조직 이원화 해소 못 지않게 지난 5년 간 학습 효과로 지역사회가 지지했던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관료주의 형태 해소·적정예산 지원·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도 21일 옛전남도청 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아특법 개정안 2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문화원을 해체시키는 법안으로, 발의에 앞서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기관 간 ‘갑-을’ 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는 수직 구조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일원화된 뒤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할 재단이 따로 신설되면, 지금의 병렬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초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 종료 시한은 지난 4월까지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특법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올 연말까지 문화전당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원에 위탁(법인화)하도록 돼 있다. 시간의 촉박함,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1호는 2호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연말에 문화전당 운영이 전부 위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직책으로 보인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문화

전당의 공공성 담보와 조직 이원화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안 2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노조의 아특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전당의 공적기능으로서 교류, 연구, 창조, 아카이브, 교육 등의 기능은 정부소속기관인 전당이 맡고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아시아문화재단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분명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계획사업 등은 모두 문화전당과 전당재단이 포괄 승계하며 특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존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모두 승계하도록 개정법안에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알립니다

###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 토론회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  
23일 오전10시 광전연 상생마루

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비수도권, 특히 호남의 침체와 국가 주요기능의 세종시 이전 재추진 논의에 대응하고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처 및 진정한 균형발전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3일 오전 10시,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상생마루)
- 주최 및 주관 : 광주일보, 광주전남연구원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남남도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지정토론

\*참석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맞춰 제한합니다.

光州日報社

## 광주,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추석 앞두고 수도권 유입 긴장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오히려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면, 어김없이 수도권발 집단감염원이 유입되는 패턴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최근 제주와 전북 등에서 수도권 관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추석명절을 맞아 수도권 거주자의 고향 방문 등도 예고돼 코로나19 대응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지역 사회 감염자는 0명이다. 지난 20일 발생한 확진자 1명은 인도에서 입국한 해외 감염자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누적 확진자 486명 중 최초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 불명이 26명이나 되고, 무증상자(245명)도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지역 내 감염세가 꺾이는 시점이면 어김없이 찾아온 수도권발 감염원 유입도 경계대상이다. 광주에선 지난 7월 17일 시민들이 뿔뿔 뭉쳐 20여일만에 ‘대전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 사태를 극복하고 확진자 ‘0’을 만들어 냈지만, 하루 만에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 때문에 인해

불거져왔다. 지난 7월 10-12일 친지 모임차 광주를 방문했던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는 같은 달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3일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겼고, 결국 11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과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지역 사회 감염원이 된 광주 시민만 37명이다. 특히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과 관련해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시민은 모두 92명에 이른다. 전체 누적확진자 중 129명(26%)이 수도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다.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와 내달 3일과 9일 예고된 보수 단체 등의 서울 대규모 집회도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문 대통령 “공수처 빠른 출범 위해 당정청 합심해달라”

###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

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의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금관련 등 정부정책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쟁점(위)를 사용합니다. ※ 리빙랩 미디어 파사드는 예정된 시설이므로, 후속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실업센터 새삼리뷰채어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